

농산어촌¹⁾ 마을공동체와 여성

김영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이 자료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이하 ‘포럼’)의 4차 포럼 주제 중 하나인 ‘농촌 공동체성 확대 분야’의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분야는 본 포럼을 준비할 당시에 포럼이 다루어야 할 주제 중 하나로 정해졌고, 최윤지 박사와 여성단체의 제안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세부 분야가 결정되었다.

- 신규유입인구의 공동체 역할 증진(귀농·귀촌, 결혼이주, 청년여성 등)
- 농촌 전통문화의 보전 활용
- 도농교류 활동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이에 발제자는 본 포럼의 핵심 정체성인 ‘농어촌’과 ‘여성’에 집중하여 젠더 관점에서 농산어촌 마을공동체가 지니는 의미와 이슈를 설명한 후 각 세부 분야의 내용을 (아는 만큼) 다루어보았다. 특히 기존의 일부 연구물들에서 농산어촌 마을 혹은 마을공동체를 특정 사업의 대상으로만 여겨 마을을 ‘공동체’보다는 ‘사업체’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 이 발제문에서는 마을이 무엇인지,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무엇이 다른지, 왜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며, 이때 증진해야 할 공동체성이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마을을 지향하고, 여성들이 마을에서 (혹은 마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을 주민 개개인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논의의 바탕에 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발제문의 마지막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제안을 제시했다.

1. 마을공동체와 젠더

1.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와 공동체성

위키백과에는,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말 또는 마실 그리고 타운(Town)이라고도 한다. 주로 도시(City)보다는 작고, 촌락(Village)보다는 큰 거주지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나, 한국어에서는 촌락이나 부락 등의 단어가 마을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한

1) 어촌이 농촌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포함하여 거론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본 포럼에서는 농촌과 어촌을 구분해서 ‘농어촌’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유지해 왔다. 나아가 산촌의 특징 역시 농촌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발제문에서는 ‘농산어촌’으로 표기함으로써 산촌을 ‘상징적’으로나마 구분해보고자 한다.

다.”고 나와 있다.²⁾

우리는 모두 마을에 살고 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을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도시에서도 그렇고 농촌, 어촌, 산촌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마을’이라는 말은, 위키백과에서 그런 것처럼, 도시에 비해 시골에 더 어울리는 단어로 통용된다. 통계청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9,455개의 자연마을이 있고, 이중 읍부에 9,128개, 면부에 40,327개가 분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자체가 농산어촌의 고유한 문화처럼 보이고 농촌성(rurality)의 표상 중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음은 민속학 분야에서 마을에 대해 연구하면서 기술한 마을에 대한 설명을 발제가 요약·정리한 내용이다.³⁾

-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 자연과 사회의 접점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공간
- 장소적 친밀성에 기반을 둔 모듬살이의 공간
- 직접적인 대인관계가 우선
- 공동운명체로서 역사성을 갖는 단위
- 마을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존속을 위해 자원을 조달하고 재생산하여 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적 기초단위

이렇게, 마을은 단지 우리가 살고있는 장소로만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개인 수준에서는 친밀한 대인관계가 일어나고 생활이 유지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마디로 국가에게나 개인에게나 마을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각각의 존재가 유지/지속되도록 하는 공간(**존재의 공간**)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어도 마을은 시간이 가도 남아서 (여러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간의 세월 속에서 벌어진 갖가지 일을 담고 있는 **역사의 장(場)**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친밀성에 기반한 애정과 결속도 있지만, 친밀하지 않은 타자에 대한 배타성, 적대성도 동반된다. 그래서 마을은 다양한 감정이 표출되고 충돌되기도 하는 **정서적 공간**이다. 또한 예로부터 현재까지 계급, 젠더, 세대, 가문 등으로 구분 짓거나 ‘우리’ 마을과 ‘저들’ 마을로 경계 지으면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하는, 갈등의 **사회·정치적 공간**이기도 한다.

특히 산업화와 근대화 이후에 생산성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 감에 따라 개발, 진보, 전문화, 획일화, 집중화 등과 짝을 지어 나타나는 경쟁, 가치의 사물화와 화폐화, 인간성 상실, 자연파괴, 공동체 붕괴는 독거사나 자살, 혹은 흉악한 범죄와 폭력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농산어촌의 경우는 앞서 말한 극단적 경향이 덜하기는 해도 과거와 비교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 자연에 대한 이해, 생산의 목적과 방식이 변한 것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농업 투입재 가격은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낮아지는 ‘이중의 쥐어짜기(double squeeze)’ 상황⁴⁾에서 다수의 농민과 그들의 자녀들은 살

2)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9D%84>

3) 이영배·현진주(2018). ‘마을연구 담론의 경향과 전망’, 『민속연구』 36집. p. 34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길을 찾아 농촌 마을을 떠나야 했고, 마을에 남은 사람들도 자본주의적 방식의 농사이거나 농업생산 외에 체험 관광, 자연경관 서비스 등 농업이 아닌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⁵⁾이 되면서 마을도 예전과 같지 않게 변하였다.

다음의 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주인 박사팀이 한국의 농산어촌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물들을 살펴본 후 그것을 기능, 조직, 물리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⁶⁾ 표를 보면,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농산어촌 마을이 경험한 변화 가운데 ‘농촌의 공동체 기능 축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세시풍속, 관혼상제처럼 마을 주민이 집단적으로 행했던 토착문화가 사라지고, 정주공동성이 약화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변화된 농산어촌의 모습 중 일부가 아니라 변화된 농산어촌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닐까.

[표1] 근대화 과정에서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변화 영역		변화 내용
마을 기능과 주민 구성의 변화	생산·경제부문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고령화로 농가경영규모 축소 • 마을 영농의 약화와 농가 단위 영농으로 전환 • 겸업농과 비농가의 증가
	마을 주민 구성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교 도시화로 제조업 노동자 유입 및 젊은 세대 영농이탈 • 농촌에 도시적 생활양식 및 전원생활 확산
	공동체 기능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시풍속, 관혼상제, 공동신앙 수행 기능 약화 • 농촌 마을의 정주공동성 약화
농촌조직과 활동 주체의 변화	조직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혈연/지연집단의 약화
	조직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마을 단위에서 행정리 단위 공식 활동 증가
	조직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금고, 수리계 등 상호부조형 마을조직 퇴조 및 마을회, 청년회 등 근대조직 활성화
물리적 환경	정주환경 및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교/평야 마을에서 주택 신개축 증가, 산간마을 위주로 공폐 증가 • 농어촌 마을 유형별 상이한 혼주화(평야>근교>중간마을)
	공동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공용이용공간 확대: 주차공간, 마을안길 확포장 등
	중심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단위 정주기능 약화로 개별가구-중심지의 직결형 공간구조 형성
	농촌의 소비공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정주, 자치의 총체적 장소에서 단순 소비 혹은 거주 공간으로 변화

출처: 성주인 외 (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p.18의 표를 발제자 재구성

더 설명하자면, 마을 영농이 줄어들고 개별 농가 단위로 농사를 짓게 되면 함께 농사를

4) Ploeg, 2008: 262-264; 김정섭, 2018 재인용

5) Durand & van Huylenbroeck, 2003; Hassink, 2017 재인용

6) 성주인 외(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8.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짓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겸업농과 비농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농토가 있는 마을보다는 겸업 직장이 있는 곳(주로 읍내)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마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농촌에 도시적 생활양식이 확산된다는 것은 농촌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축소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주택의 신개축 역시 도시적인 특성(특히 아파트구조 같은 폐쇄적인 구성)을 복사해서 주택이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이지 않다(예를 들어 번호키 현관문). 마을에 주차공간이 확대되는 반면 공동생활공간(마을창고, 공동우물, 가게 등)이 줄어드는 것 역시 주민의 ‘모이는 장소’가 사라지면서 마을 주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축소시켰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마을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마을 공동체성을 감소시켰다는 근거로, 같은 연구에 나온 다음의 표도 살펴볼 만하다. 과소마을(20가구 미만의 마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지도에 그려 보여주는 것처럼 마을에서 없어지는 조직과 침체되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농산어촌의 공동체 소멸 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

성주인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반이 자기 마을에서 상조계와 혼사 관련 계가 없어졌다고 했으며, 친목계나 놀이계, 청년회, 농민회, 새마을회가 없어졌다고 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통적인 상호 부조형 마을 조직인 각종 계가 사라지는 것은 마을에서 서로 돕는 자조적 복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2] 마을에서 소멸한 사회조직

단위: %

구분	응답비율
노인회	1.9
청년회	28.3
새마을회	22.6
농민회	24.5
상조계	43.4
혼사 관련 계	43.4
친목계/놀이계	26.4
동호회(취미여가활동)	11.3
개발위원회, 마을사업조직	3.8
귀농.귀촌조직	5.7
기타	5.7

주: n=115

자료: 4차년도 이장조사 결과 재집계

출처: 성주인 외 (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p.77의 표를 발제자 재구성

또한 다음의 표처럼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과거보다 침체하고 있다. 성주인 박사팀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원래 노인들이 전통적인 상호 부조를 더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사람이 적을수록 더 합심하여 살아갈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과연 인구 고령화와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인구 감소가 공동체성이 축소되는 이유가 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표3] 마을의 공동체 활동 현황

단위: %

구분	수행중	과거보다 침체	최근 활성화
없음/무응답	22.4	39.5	53.3
마을 공동 애경사	58.6	7.9	13.8
마을 공동 작업	54.6	7.2	17.8
도로 농수로 공동 관리	27.6	15.1	6.6
두레 품앗이 농작업	27.6	34.2	5.3
관광 등 마을친목 모임	50.0	8.6	16.4
마을 단위 도/농교류	9.2	10.5	2.0
정부지원 마을 사업	28.9	8.6	6.6
정기적 주민회의	57.2	0.7	14.5
풍물 등 여가문화 활동	9.2	16.4	3.3
취약계층 지원 등 봉사활동	11.8	13.2	3.9
기타	3.3	0.7	2.0

자료: 4차년도 이장조사 결과 재집계

출처: 성주인 외 (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p.77의 표를 발제자 재구성

이러한 와중에 최근 다른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부상되기도 한다. 그저 이웃이 서로 돕는 전통적 방식의 상호 부조가 아니라 농산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초고령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생활이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돌봄을 중요시하는 **가치 기반 공동체 활동**과 정부 지원사업을 매개로 추진되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경제적 수익 기반 공동체 활동**이 그것이다.⁷⁾⁸⁾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은 모두 마을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그 활동이 자본주의에 대항세력으로 기능할 때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은 ‘가능성’, ‘기회’로서 중요하다.

개인주의적 생활양식 확산, 생활권 확대에 따라 대다수 마을에서 전통적 공동체 기능이 약화 또는 소멸되었다는 진단이 지금까지 우세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들어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노인 공동생활, 돌봄·치유, 공동 취사 등의 새로운 활동이 마을 단위에서 새로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래 농어촌이 국가적으로 요구받는 역할 수행 과정에서 마을의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환경, 유무형 자원 등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는 데 마을 단위 주민 활동이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p.4)

7) 가치 기반 공동체 활동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기반 공동체 활동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돌봄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8) 각각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는 성주인 외(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5/5차년도)』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 농촌 공동체성 확대

이상과 같이 마을에서 사라지는 혹은 만들어지는 공동체 활동을 거론할 때, 우리는 공동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마을을 ‘마을’이라고 하지않고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공동체성’이 무엇이기에 공동체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가?

공동체를 정의하려고 할 때 그 바탕에는 ‘공동체주의’라는 이념이 동행한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공동체 결속’의 측면과 ‘개인 자율성’의 측면을 모두 중시하는 신공동체주의로 발전하였다. 테일러(C. Taylor)를 위시한 신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일단의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중첩적인 관계의 그물망”(오미영·이진영, 2006:127)으로 이해한다. 이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가치, 규범, 역사적 정체성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유지·강화하고, 자신들의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선을 창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마을’이 단지 일정한 경계를 가진 지리적 공간이라면, ‘마을공동체’는 그 공간 안에 특정한 가치, 규범, 역사적 정체성의 공유와 관계성의 유지/강화,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나아가 이런 특징을 합쳐서 공동선을 지향할 때 호명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윤리(혹은 원칙)로 **자유적 판단에 기초한 자발성과 대가를 따지지 않는 돌봄, 공생을 전제로 한 공유와 나눔**을 들고 있다. 이처럼 어떤 윤리(혹은 원칙)를 통해서 집단정신을 공유하게 할 때, 이런 것을 총칭해서 ‘공동체성’이라고 한다.

2. 마을공동체와 여성주의 관점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에 배태되어 있었던 공동체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어촌에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보살핌과 배려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삶이 인정되는 공동체여야 한다**. 기존의 사회가 ‘경제적 인간’이라는 특정한 개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계약을 정의와 평등의 원리로 간주하면서 경제 성장을 발전의 지표로 삼는다면, 반면 앞으로의 사회는 계약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어머니 노릇하는 사람(mothering person)⁹⁾과 아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적 관계를 원형으로 삼아서 아이의 생사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없는 아이를 위해 사랑과 보살핌을 베푸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¹⁰⁾ 이는 대가를 따지지 않는 돌봄과 공생을 전제로 한 공유와 나눔의 실천이 마을공동체의 핵심적 실천윤리라고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삶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여성주의에서는 개개인의 정체성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사

9)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어머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이는 버지니아 헬드(Vergina Held)의 주장으로 오미영·이진영(2006)의 논문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그루터기> 공동체를 통해서 본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에 인용되었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실상 페미니스트들은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타자(특히 남성)와 함께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해 왔다. 이렇게 공존을 궁리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는 차별, 배제, 소외, 반목, 다툼, 억압 등에 반대하고, ‘다름’을 드러내고,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인정해서 서로 간의 이해, 양보, 타협, 협력, 연대 등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여성주의는 현실적이며(현재의 농산어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가능한(앞으로 농산어촌의 마을을 유지하는데) 농산어촌 마을공동체를 이루는데 매우 적합한 사상, 이론,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이론화되거나 역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운동, 풀뿌리운동, 생활정치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실천들에서 여성이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¹¹⁾ 최근의 일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거대도시에서 마을만들기가 여성(주부-어머니)에 의해 주도되고 참여자의 다수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¹²⁾

이상과 같이 여성과 마을공동체는 의미와 실천 차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이슈가 나타난다.¹³⁾

첫째는 ‘마을’과 ‘여성’ 사이의 연관성이다. 여성이 마을일에 적합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여성이 ‘집안일’을, 남성이 ‘바깥일’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여성은 ‘생활정치’, 남성은 ‘제도정치’, 혹은 여성은 ‘마을일’, 남성은 ‘나라일’ 해야 한다는 고착화된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둘째는 ‘마을’과 ‘여성’ 사이에 내포된 긴장이다. 흔히 공동체의 위기가 가족 해체, 돌봄의 공백 등의 사회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암묵적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과거와 같은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시(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돌봄공동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여성을 호명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역시 돌보는 일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셋째,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나 정서적 유대, 친밀한 인간관계들을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가족’의 확장으로서, 혹은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예를 들어 ‘가족같은 회사’) 상상되거나 구성되어 왔다. 그렇다면 마을 역시 가족은 이성애로 이루어지고 성별분업체

11) 지역운동, 풀뿌리운동, 생활정치 등에서 여성의 활약상이 역사적으로 설명되거나 이론화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육아 운동, 먹거리 운동, 환경 운동 등은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공동체성 지향 활동이다.

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민 중 여성은 69.4%, 남성은 30.6%로 나타났다. 여성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많은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4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마을지원사업을 신청한 대표 제안자 3인 13,536명 중 제안서에 성별과 나이 정보를 기입한 사람 6,953명을 바탕으로 추산한 수치이다(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13) 이 부분은 전희경(2014)의 논문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서울시 마포은평 지역 비혼/귀어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를 참고하였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제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정상이라고 여기는 ‘정상가족’ 프레임을 가지고 젠더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은 단순히 동원되고, ‘마을’이 ‘가족’ 프레임으로 전환되어서 젠더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가족주의를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페미니스트들은 ‘지역’, ‘공동체’, ‘여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여성주의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되고/균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을 ‘정상가족’ 중심의 동질적 공간으로, ‘공동체’를 ‘개인주의 극복’을 통해 ‘가족같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여성’을 가족의 일원이자 ‘관계중심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 상정하는 경향을 비판하는 입장... (전희경의 논문 p.80)

3. 돌봄공동체로서의 마을, 그리고 여성

최근 정부와 지방 행정단위가 공모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산어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광마을, 체험마을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은 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창출, 지역개발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전의 관 주도적 특징에서 주민들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진행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채택한다. 여기에 더해서 마을 만들기가 도로를 정비하는 것 같은 하드웨어 차원의 사업보다는 ‘사람 만들기’(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와 ‘돌봄공동체 만들기’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돌봄은 저출산 및 고령화와 맞물려서 누가 어떻게 돌봄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그것이 마을공동체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주장은 농산어촌의 사회복지 현실에 견주어 납득할 만하고, 또한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질 만하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든 지역사회이든 돌봄을 받을 만한 자원이 없어서 시설로 들어가거나 집에 방치되거나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경우,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노인 돌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 돌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판정이나 자격요건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자 선정에 탈락한 노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 제도로 인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나이나 학력에 무관하게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다수 배출되면서 요양보호사 고용을 빌미 삼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요양보호기관, 요양보호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성적으로 괴롭히는 요양 대상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자나 그 가족, 요양보호사 자신의 자질이나 요양 대상자 학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농산어촌에는 그나마도 부족한 실정이다.

돌봄과 관련한 또다른 경향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즉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16개 시군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부는 ①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우려¹⁴⁾, ② 평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욕구¹⁵⁾, ③ 가족(특히 여성)의 돌봄 부담의 가중¹⁶⁾, ④ 사회보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¹⁷⁾를 이유로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는 관련 시설이 대상자 대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며, 있는 시설도 군청이나 면 주민센터 소재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지 않은 마을에 살고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서비스 제공자 역시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 더군다나 시설 자체가 없는 농산어촌 기초지자체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서비스 연계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고, 대상자가 생활하고 싶어하는 지역사회(시설에 반대개념으로서의)는 공적 기관이든 민간 기관이든 주민이든 그들과 더불어서 살 준비(혹은 생각)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규모는 적어도 귀농어·귀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있는 보육시설도 농산어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보육교사가 적다보니 낮은 질의 서비스라도 만족해야 하며, 농어촌의 특징에 맞는 시간제, 야간 연장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사람 모두는 동시적이든 평생에 걸쳐서이든 타인의 돌봄을 받기도 하고 타인을 돌보기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은 상호부조적인 행위이다. ‘돌봄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한 조한혜정은 옛 마을과 같은 상호신뢰에 기초한 돌봄을 도시 안에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돌봄공동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문화를 강조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 구체적으로 가족해체와 저출산, 고령화와 안전망의 파괴, 교

14)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를 예상하고 있다.

15)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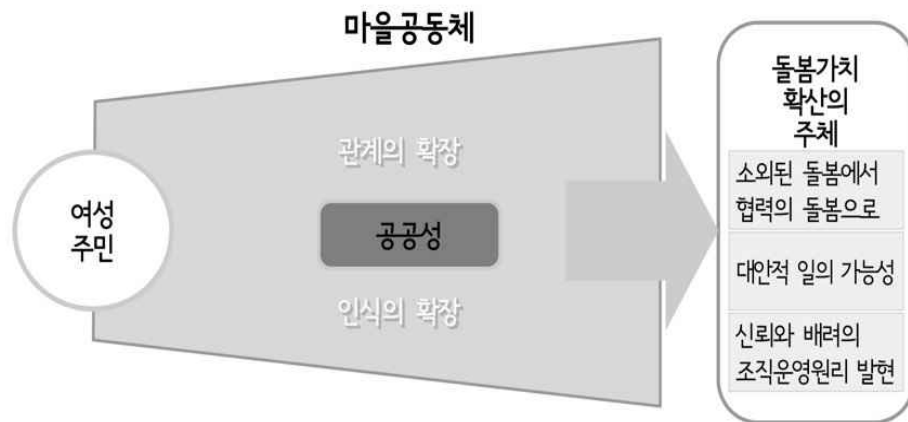
16) 주돌봄자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85%가 여성이고, 며느리, 딸, 배우자 순이다.

17) 우리나라 노인 공적연금은 한 달에 35만원이고, 이 중 월평균 3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육의 파탄 상황을 돌파할 주체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면서 돌봄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재편을 위한 근원적 질문과 그 재편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일의 핵심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공식/지하 영역에서 돌봄을 감당한 이들의 경험을 사회화하는 것이다.¹⁸⁾

돌봄공동체가 ‘가족친화도시’와 다른 점은 돌봄을 개인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체와 지역으로 확산시켜 **공공성**을 강조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사적 영역의 활동으로 간주되었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자.



Ⅰ 그림 1-2 Ⅰ 돌봄 가치의 확산과 공공성 획득

출처: 김영정/안인숙(2015).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 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활용 방안’. p.7

여성주민이 수행했던 돌봄과 살림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전의 자원봉사 또는 관제동원의 성격을 띤 지역 활동과 달리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관계와 인식을 확장하여 공공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 때 ‘가족 내 돌봄’을 ‘지역에 의한 돌봄’으로 확대한다면 여성=돌봄이라는 고착화된 성별분업과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를 마을공동체로 확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것이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돌봄공동체라 할 때 돌봄을 제공하게 될 사람(여성이든 남성이든)은 돌봄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로 위치 지워지고, 개인이나 가정으로 한정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돌봄을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협력하는 돌봄으로, 농업 이외에 돌봄이 대안적 일이 되도록, 돌봄을 통해 돌봄을 받는 자와 돌봄을 주는 자 사이는 물론이고 서로 돌보는 마을공동체 주민 간의 신뢰와 배려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조한혜정(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pp. 21-22.

돌봄공동체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하여 최근 농산어촌에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을 마을의 돌봄공동체를 조성하는 한 방법으로 삼아도 좋다. 현재 농특위의 농촌분과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입각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화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발제자가 기고한 농촌여성신문의 기사 내용으로 대신한다.

사회적 농업, 여성농민의 새로운 길

지난 10월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는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장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 있는 다양한 단체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 날 주제발표를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섭 박사는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데 기여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누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었는가? 김정섭 박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회의 통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스스로 그런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일부의 노인, 여성, 외국인, 장애인, 범법자 등, 그리고 대부분의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 경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적 농업은 이런 사람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 마을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로 인해 농촌 마을을 ‘포용’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회 혁신적’ 실천이다.

그런데 왜 꼭 농촌이고 농업이어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농촌에 살고있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곡식과 자연을 돌보는 것처럼 사람을 돌보는 일을 태생적으로 농민이 잘 할 수 있고, 이웃을 챙기는 일도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업은 폐쇄된 공간에서 기계적인 동작으로 사람을 옥죄는 일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생명을 키우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얼마간의 여유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농사짓는 일의 경제성은 날로 떨어져서 농민의 삶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농민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농민이 경제력은 떨어졌어도 사회력마저 잃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기능성에 입각하여 농민이 돌봄의 주체로서 낮은 농업 경제력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농사를 짓듯이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지어서 더 안전한 마을, 더 배제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이다. 나아가 이런 농민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의 ‘새로운 농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새로운 농민이 여성이어야 한다거나 남성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불필요하기도 하고 시대착오적이기도 하다. 성별분업적 사고(남성에게는 남성의 일이, 여성에게는 여성의 일이 정해져 있다는 사고)가 성차이를 낳고, 남성의 일이 여성의 일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보는 남성중심적 사고(가부장적 문화)가 성차별을 낳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오래 전부터 성별분업적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를 없애기 위해 투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류의 유전자에는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장점이 박혀 있는 듯하다. 사냥으로 생계를 꾸렸던 원시시대에 식량감을 구하러 나간 남성들은 그것이 멧돼지이든 토끼이든 크기와 상관없이 거꾸로 매달아 덜렁덜렁 메고 마을로 돌아왔다. 잡은 즉

시 처리해서 각자 몇 덩어리씩 나누어 들고 오면 가벼울 것인데 그러는 법이 없었다. 포획한 그대로를 뽐내고 싶어서 일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것을 쓰임에 따라 자르고, 각 집의 처지에 맞게 나누는 일은 마을 여성들의 몫이었다. 저 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이 집에 뼈국이 필요한지 아니면 연한 부위의 고기가 필요한지 아는 것도 여성들이었다. 그러니 적절하고 공평한 분배는 여성의 마음과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농업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성과 더 궁합이 맞다. 마을에서(그리고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미소와 칭찬을 보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은 남성보다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근거해서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의 하나로 사회적 농업이 수용될 것이고, 사회적 농업은 사라질지도 모를 농촌마을을 공동체의 요람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농업은 어쩌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배제된 농민이 그 보다 더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농민'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의 보조자로만 인식되었던 여성 농민은 자기 유전자에 박힌 적절한 돌봄과 공평한 나눔의 특기를 살려 새로운 농민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 농사짓기 어려운 여성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농장, 결혼이주여성이나 귀농·귀촌한 여성 같은 농촌의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농장 등 여성의 자매애로 이루어진 사회적 농업의 길은 다양하다.

농촌여성신문 제6009호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Ⅱ. 농산어촌 마을공동체의 이질적인 구성원에 대한 환대와 주민간 갈등 조정¹⁹⁾

1. 귀농어·귀촌인

귀농어·귀촌인은 농산어촌 마을의 새로운 유입 인구로 인구절벽의 위에 처한 농산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다.²⁰⁾ 그러나 이들과 마을의 원주민과의 관계는 평탄해 보이지 않는다. 성주인 박사팀의 연구보고서에는 최근 귀농·귀촌 수요가 증대되면서 농어촌 마을이 도시민의 정주지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도 역시 귀농·귀촌인은 '도시민'으로 기록된다. 연구보고서를 더 읽어보면, 이들은 기존 마을 외부에 자리를 잡는 경향이 많으며, 관련 연구에서도 일반 마을로 이주하는 경우보다 전원주거단지호 이주하는 주민 만족도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고 보고하고 있다.²¹⁾

19) 원래 세부분야를 신규유입인구의 공동체 역할 증진이라고 하였으나 이제 20대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신규로 유입하는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귀농어·귀촌인과 결혼이주여성, 청년여성 모두 아직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발제자 임의로 '역할의 증진'을 '이질적인 구성원에 대한 환대'라고 바꾸었다.

20) 귀농·귀촌인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에는 13,019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1,504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 중 여성은 31.4%를 차지했다.

21) 성주인 외(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p.19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그러나 귀농인이 농촌사회에 적응하는데 마을 주민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한 응답이 67.3%였다는 연구, 귀농인 정착초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의 공급처가 귀농지의 주민의 역할이 37.3%가 된다는 연구 등²²⁾을 보면 귀농·귀촌인에게는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는 행정기관보다 마을 주민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귀농·귀촌 초기부터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마을공동체는 사람이든 자원이든 풍성하게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귀농인들이 갖는 마을 공동체의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귀농지 마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의 연구자는 귀농한 지역이 주로 남성/남편의 고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²³⁾ 그렇다면 농어촌 여성정책의 측면에서는 남편을 따라 근거도 없는 곳으로 귀농·귀촌한 여성의 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면 마을 공동체의식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관련 여성정책이 그녀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안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귀농인 중 45.0%가 귀농지역 주민과 갈등을 경험했고, 이 중 42.1%가 단순히 외지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했다는 답변을 했다²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귀농·귀촌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반 가까이가 경험한 갈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또한 갈등은 상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촌 주민이 귀농·귀촌인으로 인해 겪는 갈등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인의 경험과 동등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당 연구자는 귀농인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식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중심에는 마을의 토호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토호세력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을 포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상응해서 귀농·귀촌인도 농촌 마을의 현실과 농촌 주민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살다가 온 귀농·귀촌인과 농촌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가치, 말과 행동의 표현 방식, 생활습관 등 삶 전체에서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귀농·귀촌과 관련한 농산어촌 마을공동체의 이슈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

2.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앞의 귀농·귀촌인 보다 더 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국적과 인종이 다른, 이질적인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

22) 두 연구는 김백수·이정화(2013)의 연구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와 마을 공동체의식이 심리적 복리감에 미치는 영향: 정착을 중심으로’에서 인용되었다.

23) 김백수·이정화(2013)의 연구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와 마을 공동체의식이 심리적 복리감에 미치는 영향: 정착을 중심으로’에서 나온 결과로, 이 연구에서는 마을 공동체의식을 충족감(‘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연대감(‘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다’), 소속감 및 상호 영향의식(‘나는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서적 친밀감(‘나는 이곳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으로 구성하여 점수화했다.

24) 오수호(2013), ‘귀농·귀촌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 농촌 공동체성 확대

성은 가족재생산 기반이 무너진 지방도시와 농산어촌에서 나이 든 총각이 외국 출신의 배우자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한 자구책이었다.²⁵⁾ 더불어 이들은 가사노동은 물론이고 가정 내·외의 돌봄노동, 농업노동, 농업외 노동 등 농촌의 주요한 노동인력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어촌에서 재생산·돌봄·노동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⁶⁾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2000년대 중반에 수행된 조사들에서 외국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은 “배우자가 순종적이고, 부모를 잘 모실 것 같아서(농촌 39.5%, 도시 36.9%)” 국제결혼을 택했다고 했다(여성가족부,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의 부모 중 최소한 1인 이상과 동거하는 경우가 일반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보다 약 2배 높았다. 나아가 2007년 경상북도와 2006년 전라남도에서 시부모(시조부모 포함)와의 동거비율이 각각 58.9%와 48.4%로, 도시보다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70.5%로, 어려움 중에 첫 번째가 언어소통(34.0%)이고, 다음은 노인돌보기(16.2%), 노인 건강챙기기 및 간병(15.8%) 순이었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2006년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다문화가족법」을 제정하고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사회통합지원정책을 마련하였고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 의사소통 부족, 문화격차, 부부갈등, 자녀양육 등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2세 교육지원 보전, 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취업알선 등의 경제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²⁷⁾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도시에서 삶의 질에 대한 그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²⁸⁾, 도시나 농촌이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다.²⁹⁾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중 ‘결혼이민자/귀화자등’ 자료³⁰⁾를 활용해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도시와 농촌

25)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1,274건으로 전체 혼인건수의 7%에 해당된다.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는 전체 혼인건수 대비 평균 4.85%를 차지한다. 이러한 혼인패턴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비중을 나타내지만 동부의 경우 전체 혼인건수 대비 4.35%인데 반해 읍부는 5.82%, 면부는 7.65%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건수 비중이 더 높다. 2015년 기준, 253,791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

26) 특히 돌봄공백에 대한 대안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은 조경진(2017)의 논문 ‘한국의 돌봄공백과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27) 이에 대해서는 윤기찬 외(2016),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QOL) 도농간 비교분석’ p.344에 설명되어 있다.

28) 남인숙과 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이다.

29) 김진희와 박옥임(2008),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논문이다.

30) 이 자료는 2012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통계청 전문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전체 15,001명 중 남성과 미혼여성을 제외하고 12,3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으로 비교한 윤기찬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지역단체 참여와 이웃 간 유대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도시지역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고, 특히 이웃 간의 유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논문에서는 이웃 간 유대를 맺고 상호관계가 양호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에 거주할 가능성이 2.604배 높다는 결과도 보여주었다. 또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지원 필요 정도 역시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발제자가 어촌 현장에서 조사할 때, 그 섬의 여성 중 한명이 정부가 섬여성에게 ‘결혼이주여성’보다도 못한 처우를 하고 있다면서 맹비난을 했던 기억이 난다. 자신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결혼이주여성은 외국에서 왔지만 한국 국민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현재 국민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을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기 위해 우선은 지역사회 차별을 없애는 활동, 이들에게 ‘친정’같은 여성 멘토가 되어주는 활동, 이들이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는 활동을 프로그램화해야 한다. 정부는 개별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마을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과 연관있는지를 따져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청년여성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은 농촌에 활력을 줄 뿐 아니라 나이든 여성 농민들의 든든한 배후이자 동료로서, 그리고 미래 농촌의 승계자로서 농촌어촌 마을 안의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의 미래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방안’ 연구용역에서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진행된 연구 중 마을공동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을 추려보겠다.

첫째, 농산어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아보겠다는 젊은 여성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이상한’ 시선과 소문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용역연구의 인터뷰조사에 참여한 젊은 농민들은 주민들로부터 “도시에서 실패해서 내려왔다”, “이혼당한 것 같다”, “지원사업 받는 브로커다” 등의 말을 들어서 속상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있었다. 사업이 안되고,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관계도 청산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위로받을(경우에 따라 축하받을) 일이다. 더군다나 진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면, 그러나 지레 짐작하고서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것, 어떤 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농촌 주민이 외지로부터 온 젊은이를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이 준비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인의 원인이 불신에 있음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농산어촌에 뿌리 깊은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에 강하게 존재하는 여성 비하와 성적 대상화 문제는 가뜩이나 그런 사안이 민감하게 통제되고 있는 사회적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분위기와는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남자를 꼬시는 여자애’, ‘자러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여자’라는 말을 듣다가 실제로 성추행과 폭행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을에 계속 살 수 있는 젊은 여성은 극히 드물다. 또한 자신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 주민들끼리 모여 ‘베트남 애나 불혀가지고 장가 보내야겠다’, ‘공단에 가면 아가씨들 많다’ 식의 대화를 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거북하다.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이 듣게끔 하는 것은 언어에 의한 성폭력이다.

셋째, 젊은 여성들은 젊은 연령대의 여성이다. 그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은 오직 여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어촌에 (또다시) 뿌리깊은 연령차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이 젊은 여성들에게 마을은 수십명의 ‘꼰대’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마디의 ‘꼰대말’을 들어야 하는 공간일 것이다. ‘언제 결혼할 거냐’, ‘시집가서 남편 뒷바라지 해야 한다’, ‘맘에 드니 내 남동생하고 만나라’ 등.

넷째, 위와 같은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멘토로서 힘을 주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자로서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중년 여성농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연구에서 젊은 여성들은 중장년 농촌 여성주민들이 여성 비하와 성적 대상화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감을 가졌다.

이상의 내용은 젊은 여성들이 농촌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는데 장애가 되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농촌 마을공동체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따른 차별, 여성비하와 성적 대상화, 성폭력 범죄 등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재차, 그리고 강력한) 뿌리깊은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젊은 여성들은 차라리 마을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편이 낫다.

여기에서 여성 농민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젊은 여성들의 마을 살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언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즉 ‘멘토’로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 전체의 악습(성과 연령에 따른 차별, 여성비하와 성적 대상화, 성폭력 범죄=가부장적 사고와 문화)에 젊은 여성들과 합세하여 대항해야 한다. 마치, 죽기 전에 자신이 살아온 60년, 70년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으로 말이다. 또한 상징적이 될지라도 성평등마을규약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혹은 살기로 한) 젊은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에서 이 부분의 내용이 포함·강화되면 좋을 것이다.

4. 각종 마을사업에서 주민들

새마을운동 이래 각종 마을사업이 도시나 농산어촌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매우 익숙할 만큼 보편화되었다. ‘마을만들기’로 지칭되는 각종 사업들을 비롯해서 이미 종료된 사업,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앞으로 계획된 사업 등 다양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도 (마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치 부처마다 마을계획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양하다. 본 발제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는 농산어촌의 마을 사업이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려고 했으나 발제물을 제출하는 날까지 찾을 수 없었다. 그냥 발제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나열하자면, 농촌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사업), 농촌마을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치매안심마을, 정보화마을, 관광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여기에는 국토부, 여가부, 농림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의 정부조직이 관련되어 있다.

각종 마을사업을 본 포럼의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업들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우에 공동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나아가 오히려 공동체성을 파괴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배와 황현(2016)은 농어촌지역의 커뮤니티 갈등 유형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마을지도자와 주민간, 담당공무원과 주민간, 마을지도자(이장, 작목반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사이, 주민 사이, 그리고 광역마을사업의 경우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개인사업체의 성격이나 공동사업에 따른 운영방식의 의견차이
- 수익 배분, 동업자 의식 부족
- 조정 등 갈등 해결자 부재, 소통방법 미흡
- 한정된 자원의 경쟁적 사용, 무임승차
-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의 불명확
- 사업에 따른 인식공유 미흡
- 정부 지원의 행정단위별(읍, 면, 리) 지급(조합 같은 이익공동체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
- 정부(지자체 등)의 관련 해결 역할 부재(사업비 지급 이후에는 관련 관리는 대부분 추진자 혹은 이장 등이 도맡음)

한편, 연구자들은 주민 간의 갈등은 주로 귀농·귀촌자와 마을 원주민 간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갈등의 특징은 대부분이 도시거주자였던 귀농·귀촌자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별적 텃밭은 관리하거나 은퇴 후 개별 사업을 통해 이주하는데, 정부의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입지 등을 둘러싸고 충돌을 표면화하던가, 사업/회의/ 마을공동체 행사 참여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다던가, 정부차원의 귀촌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주민 측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한다든지 등 갈등의 소지는 다양하다. 전반적으로는 개인성향과 집단성향의 충돌, 마을문화와 개인문화의 충돌, 상대적 박탈, 이해부족, 인식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마을사업보다는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사이의 관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본 포럼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마을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마을사업의 성과에서 여성의 몫을 찾아보는 일이다. 발제자는 최근 농어촌기초생활거점사업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의 광역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상당수의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획회의부터 추진단 운영에 이르기까지 담당 공무원과 주민의 이름 중 여성을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따라서 여성위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참여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자문내용의 주를 이루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 농산어촌사업에서 여성의 몫이다(모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업계획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될 때에도 가시화되기 어렵다. 농산어촌의 마을에는 분명히 남성보다 많거나 남성과 거의 같은 수의 여성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과 사진에 여성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녀들이 살아왔던 방식, 즉 사회로부터 강요되어 왔던 방식(‘여자는 집안일을 잘 하면 된다’)이 내재화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그간 잘못 했던 여성차별을 기회가 될 때마다 시정해야하고, 그 기회로서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마을사업을 지목할 수 있겠다.

옆의 그림은 본 포럼의 초창기에 최윤지 박사의 의제 제안 발표문에 나왔었다. 마을의 일을 담당하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된 마을 여성주민이 겪는 일상의 모습은 공간 변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해결책으로 마을사업 계획과 실행에서 여성 주민이 참여하려면 여성이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어촌계장이 되어야 한다. 부녀회장 직분으로는 (늘 그렇듯이) 회의때마다 음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 농촌 공동체성 확대

식을 장만해달라는 요청만 받게 될 것이다. 마을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문제는 본 포럼의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 분야에서 다룬 바 있다. 핵심은 직책이 있어야 참여하는 마을사업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마을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마을의 대부분의 경우 여성에게 부과된 노동은 과중하다. 나아가 농촌이 ‘할머니 품속’ 같은 이미지로 외부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와 안정, 보살핌과 같은 다양한 정서”의 제공도 요구받는다.³¹⁾ 발제자가 연구한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 중 하나인 강진 청자골 달마지마을에서는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이 마을 이장(남성)은 방문한 아이들을 ‘사람꽃’이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그렇게 귀엽고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 여성들은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볼 틈이 없다. 아이들이 농촌을 체험하면서 먹어야 할 식사와 간식, 청소와 빨래(특히 이부자리)는 바로 여성의 몫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음식 맛이 좋아서 판매하기 시작한 꾸러미 사업으로 8개월이 지난 후 3천 만 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마을에서 유일하게 ‘꽃꾸경’을 못하는 사람은 마을 여성이다. 이렇게 농촌체험마을사업에서 여성 노인들은 몸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마: 궁께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그래.

면담자: 그럼 어떻게 그런 거를 다 관리하시고, 여기 사무실 청소도 다 하시고.

마: 사무실 청소 만이여? 불 때다 말고 가브러, 그러면 그거 걸어 놓아지. 또 가서. 걸어놓고 집에를 가야지 그럼. 우리가 늦게라도 와요 그러믄 늦게라도 오믄 불이다 꺼진다.

면담자: 방이 따뜻하더라구요. 언제 불을 때셨대요?

마: 방이 따뜻해? 어제 KBS 그 사람들 여기에서 자고. [가고 나서] 청소[도 하고] 어저께 아침에는 [그 사람들] 올지 생각도 안했어. 청소를 혼자서 싹 했어. 그래 놓고 있었더니 점심 때 돼서 왔다고 그러. 그래서 뭐시 와야?

면담자: 애기도 안 해주시는 구나 이장님이. 온다 어쩐다...

구술자: 전화도 잘 안혀. 오면 나만 바빠 디지제.

면담자: 여기서 불을 때세요? 이 방?

구술자: 아궁이 있어. 메주 말리는 발효시키는 요 가운데 것만 기거든. 이 불 다 깔고 다해서 해놔더니 오메 방이 뜨거워서 다른 이불을 다 내 가지고 또 깔았는가벼...

면담자: 그런 관리를 할머니가 다 하시는거 무리다 무리...

구술자: 그니까 내가 어찌꼬. 넵똥어 그냥. (박주희, 2009: 236)

Ⅲ. 농촌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농촌의 마을공동체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든 다음세대에 전수하든 해당

31) 박주희(2009), 전라남도 주민주도형 농촌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질적연구의 내용이다.

문화를 매개로 마을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마을 하나는 일종의 ‘민속박물관’과 같고, 젊은 세대보다 전통을 잘 알고 간직하고 있는 마을 어르신은 ‘민속학자’, ‘박물관 큐레이터’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 발제자의 지식이 부족하여 다음의 두 사례를 거론하면서 논의를 부친다. 강진군 비자마을 사례는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농촌 마을사업 자문을 맡으면서 2015년에 현장조사한 후에 센터의 단행본에 수록된 내용이고, 두 번째 사례는 제주도 잠수를 다룬 논문을 참고하였다.

① 비자마을의 베틀놀이³²⁾ 사례

비자마을은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에 속하는 자연마을이다. 전에는 삼신리의 아래쪽에 위치하였다고 해서 ‘하신’이라고 했으나 ‘내려본다’는 뜻으로, 하급성이 짙다고 하여 2009년 11월 마을 사람들이 명칭변경을 건의해서 2012년 1월부터 비자동으로 바꾸었다. 비자동이라 한 것은 약 500년 전 마을 뒷산에 비자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동은 장흥마씨가 강진군 작천면에서 이주해 와서 일촌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 일부 타성들이 정착하여서 형성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75가구에 14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중 남성은 63명, 여성은 85명으로 여성의 수가 많다. 연령대는 80대가 20여명, 70대가 50여명, 60대가 40여명, 그리고 50대와 그 이하가 20여명 정도로, 현재로는 70대와 60대의 주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총 토지면적의 약 90%인 비자동은 옛날에도 논농사를 주로 짓는 마을이었으나 가진 논이 없거나 논밭의 소출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베틀기가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었다. 물론 형편이 좋을 경우에도 식솔의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소일삼아 집에서 베를 짰다. 마을의 이러한 과거지사로 인해 1986년 면사무소의 윤권식 총무계장은 베틀하는 과정에서 불리웠던 노래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비자동 마을 주민들에게 베틀기를 베틀놀이로 복원·계승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당시 여성 주민들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해야 하고 춤을 추어야 하는 이런 공연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권식 총무계장은 주민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마을에 베틀놀이 보존회를 만들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베틀기 과정을 재현하였다. 그렇게 해서 1986년 제15회 금릉문화제³³⁾에 출전하여 베틀놀이를 군동면 대표 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같은 해 제15회 남도문화제에서 종합최우상을 수상하고, 강진군의 향토문예진흥에 이바지 한 공로로 군수표창이 받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베틀놀이 공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소중한 문화라는 의미도 부여하였다. 그때부터 비자동은 베틀놀이를 발전시키는데 박차를 가했다. 현재 비자동의 베틀놀이는 강진군향토문화유산 제37호(2010년)로 등록되어 있다.

32) 베틀놀이는 농악놀이, 고싸움, 지신밟기 등처럼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놀이로, 흔히 ‘두레길쌈놀이’라고 한다. 이는 신라 초기 유리왕시대에서부터 비롯된 경쟁적인 적마풍속에 기원하는데, 6부(六部)를 둘로 갈라 왕녀 두 사람이 각각 두 편의 부녀자를 통솔케해서 7월 보름날부터 매일 이른 아침 6부의 뜰에 모여 밤 10시까지 베를 짜다가 8월 보름이 되면 그 동안의 성적을 비교하여 진편에서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이긴 편을 치하하면서 가무와 온갖 놀이를 벌이는 행사였다. 이런 전통은 경상도에서 가장 성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

33) 금릉문화제는 1973년부터 강진군에서 개최된 문화축제로 1996년부터 청자문화제로 변경되었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이런 일련의 과정에 기여한 사람은 물론 베틀놀이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이지만, 특히 세 인물이 주목된다. 1986년 당시 군동면 총무계장이셨던 윤권식 씨(남, 작고)와 현재 마을의 모든 일을 총괄하시는 윤호경 이장님(남, 70세), 그리고 공연에 대한 책임을 맡으신 조연순(여, 73세) 지도자이다.

그 날 마을회관 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실내가 짙 차다시피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뒷방과 아랫방을 가르는 중문을 열어서 공간을 더 마련한 상태였다. 당시의 자료에는 총 38명이 참석인원이고, 그 중 마을 리더를 포함해서 마을 주민이 28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할머니들께서 많이 앉아계셨던 것은 분명하다. 그분들은 마을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했고, 우리 전문가들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것에 대해 자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3차에 걸친 포럼을 마친 상태였고, 전문가들은 겨우 2시간 여 동안 내용을 들어본 것뿐이어서 말이 자문이지 그저 몇 마디 거드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내심 이치에 맞지 않은 웅색한 자리에 왔다는 후회가 앞섰지만 그것은 잠시 뿐이었다. 흔히 ‘뒷방 늙은이’로 인식되는 -요즘은 그런 말을 입 밖 에 내는 사람이 흔치 않지만- 노인들, 그것도 항상 ‘학교도 못 다녔다’는 말을 달고 사시다시피 하신 할머니들께서 당신들 마을에서 10년 후에 늘어났으면 좋겠는 것과 줄어들었으면 좋겠는 것의 목록을 작성하시고, 지금 마을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시며, 거기에 더해서 베틀놀이의 고충과 바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문은 곧 학습으로 바뀌었고, 사회복지학은 여성학으로 넘어갔다. 시집 와서부터 베를 짰던 여성들, 베를 짜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과 대화했던 여성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베짜기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여성들이 백발의 할머니로 모여앉아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대학의 어느 과목에서도 가르쳐지지 않고 배울 수 없는 경험이었다. (중략)

거기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의 할머니들께서 계셨는데 나이가 덜 드신 분은 최근의 일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옛날의 일을 적절하게 섞어서 말씀해 주셨다. 목화꽃에서부터 시작한 베짜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무명베, 명주베, 모시베 등 베의 종류와 방법, 시기의 설명으로 넘어갔고, 기계로 짜는 광목과 옥양목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4월에 씨를 파종하고 10월에 열매가 익어서 흰 솜이 되면, 그것을 가을 햇살에 말려 타고, 말고, 짚고, 매고, 짜는 일



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농사일과 집안일을 다 하고 난 밤에 다시 베틀에 앉아 야간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마치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 사이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지만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 사실 실제 비자동에서 베짜기가 성행할 당시 이 할머니들은 10대나 20대였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는 군대이야기보다는 어린 시절 추억담에 가까울 수 있다. (중략)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주로 공연은 강진군이 주력하고 자랑하는 강진청자문화재를 비롯하여 광주의 충장축제, 전라남도 전역을 포괄하는 전남민속예술축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열거한 축제들은 각각 1년에 한 번씩 개최되지만 어르신들은 1년에 서너 번은 공연을 준비를 해야 한다. 참여하는 행사에 따라서 공연 시간이 달라지지만 원래는 약 40분 정도 공연한다. 거의 20년 가까이 해온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할 만도 하지만 어르신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동작이 민첩하지 않으며 임기응변적 대처가 쉽지 않아서 연습은 필수적이다. 어르신들께서 공연하신 동영상 통해 1986년과 2003년 공연을 비교한 결과, 인원이 줄어듦과 소리가 느려졌으며 동작도 단순해 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1986년에는 농악놀이도 포함되었는데 당시 농악을 리드했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부터는 제외되었다. 40여명이 함께 등장하고 퇴장하며 목화 따는 것부터 필베놀이까지 베풀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공연에서 어르신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 그에 따른 동선(動線), 소리의 추임새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성공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다. 더군다나 축제는 주로 봄과 가을에 있게 되는데, 두 계절은 농사에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낮 동안의 논밭 일이 끝난 후에 연습을 하게 되고, 공연 날을 전후해서 며칠 동안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고충이 크다. 앞서 말한 안성에서 개최된 경연대회의 경우 어르신들은 새벽 4시에 출발하여 경연대회를 오후 7시까지 하고 비자동 집에는 다음날 새벽 1시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평균 연령 70대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이렇게 긴 시간동안 차를 타고 다니고 하루 종일 공연장에 머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략)

거기에도 공연은 공연 그 자체 이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일단 물레, 베틀, 바구니, 목화꽃화분 등 가지고 가야할 것이 많다. 그래서 베틀놀이 공연을 하는 여자 어르신 40여명 외에도 남성 주민 12명이 함께 가야하고 트럭도 필요하다. 공연 장비를 실은 트럭은 1톤 짜리로 3대가 이동하고 공연 참가 여성 어르신을 위해서 1대의 관광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비자동 어르신들은 ‘가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비는 옛날 그대로여서 무겁고 또 많이 낡아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다른 단체 공연에서는 다듬이질도 위 표면만 다듬이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비자동 어르신들은 옛 다듬이돌을 그대로 사용한다. 목화꽃 따는 장면에서도 가능한 모조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려고 지금은 마을에서 재배하지 않는 목화꽃의 종자를 보관했다가 약 50개를 화분에 심어서 공연장으로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베틀공연은 거동할 수 있는 마을 주민 거의 모두가 동원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이런 일에는 예산도 많이 드는 법이라서 트럭과 관광버스 대여비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에서 공연장 오가는 동안의 식비와 간식비도 필요하고, 평소에는 장비수리·유지비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비용은 주로 경연에서는 수상 상금, 축제에서는 공연비로 충당하고, 지방문화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제공하는 년 300~400만원으로 충당한다. 예를 들어 안성 경연대회 때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400만원이 전액이 안성에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중략)

어르신들께서 일 년에 몇 차례씩 축제의 현장에 나가시는 것은, 말하자면 ‘할 일 있어’ 관광버스에 오르시기 위함이다. 축제가 열리는 이곳 저곳을 관광 삼아 다니시는 것도 좋고,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툭 터진 공간에서 흥겨운 소리하고 어깨춤 덩실거리는 것도 좋다

고 하신다. 거기에다가 생전 학교 문전에도 가 보시지 않은 어르신이 상패와 상금을 받는 일도 좋으셨다. 어르신들에게는 마을 사업도, 소득 증대도, 문화 계승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단칸방에서 혼자서 쉬지 않고 밤새 베를 짜야 자식들을 먹이거나 공부시키는 베짜기가 아니라 아직 몸이 건강해 관광버스에 너끈하게 올라타서 휘휘 세상 구경하다가 흥겹게 한 판 놓고 나면 그만인 베짜기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에게 쏟아지는 박수와 찬사에 신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노년으로 정리된다. 온화하고 안전한 외모를 가진 조연순 지도자께서는 처음 공연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야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른 어르신도 너무 떨려서 공연 전에 술을 한잔씩 마시거나 안정제를 먹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공연 횟수가 늘어나고 상도 받고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놀이를 보여주는 일이 즐거워졌고 또 더 좋은 상을 타고 싶은 욕심도 생기더라는 말씀을 하셨다. (중략)

비자동 베풀놀이를 통한 베짜기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삶의 필수재를 공급할 목적으로 베를 짜지 않는다. 또한 -혹시 유리왕시대에는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죽어도 가장 잘 짠 베 한 필을 남겨서 영원성을 확보하고 싶은 동기에서 베를 짜는 것도 아니다. 이제 베풀놀이는 베짜기라는 노동 혹은 작업을 의미하기 보다는 그것을 공연으로 재현함으로써 언어와 기억을 통해서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여 역사를 만드는 ‘행위’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노동과 작업과 달리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는 활동으로 성격이 워진다. 타인의 현존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사적 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 전통을 보존하는 마을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전수문제를 다루어어야 한다.
- 전통 보존하려고 하는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물질적 대가(일종의 직업으로서)이 있어야 어르신들의 전통 보존활동이 상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전통을 보존하는 어르신들의 활동 자체가 어르신 심리적·육체적 건강에 유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구의 몸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차량, 젊은 메니저 등)이 필요하다.

② 제주도 잠수 사례³⁴⁾

제주도 잠수(잠녀, 해녀)들은 오랫동안 과거의 어로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즉 기계적 장치 없이 ‘물질’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는 해양자원의 남획과 고갈을 막으며, 새로운 어로자의 출현으로 인한 기존 잠수들의 퇴출과 자원에 대한 권리 약화를 막고,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국내 어촌사회 연구는 여성들의 채집 어로활동이 남성 중심의 그물 어로활동에 가려지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갯벌과 해안가에서 채집하는 여성들의 어로는

34) 이 내용은 안미정의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제주도 잠수(潛嫂)의 사례에서’를 요약한 것이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단지 오래되고 낡은 방식이라는 시각이 존재했다. 특히 제주도 해녀들의 어로는 연약한 여성이 바다에서 자맥질하는 ‘특수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해녀들은 ‘특이한 생활문화의 전승자’로 비춰졌다.

2006년 기준 제주도의 잠수인구는 5,406명이고, 제주도 어업인의 27.8%를 차지한다. 잠수들은 하루종일 작업할 어로 공간을 계획하고 몇몇이 함께(“멤버”라고 부름) 이동해가며 작업을 한다. 멤버들은 물질하는 도중에도 서로의 위치를 파악해 위험에 대비한다. 같은 구역에서 경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연대의식과 상호조력을 중시한다. 소수가 많이 벌기보다는 다수가 적게 버는 방식으로 연안자원을 분배하는 매커니즘을 유지한다.

잠수들이 스쿠버다이빙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고령의 여성들인 잠녀들이 새로운 어법을 배우는데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동료잠수들 가운데 고령의 잠수들이 탈락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이들이 무지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마을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가장 적합한 어로방식을 선택한 결과이다.

이들은 소라같은 주요한 시장상품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어장감시 활동도 한다. 잠수회는 자율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소라가 잘 번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두고 그들은 ‘바다를 지키는 일’과 ‘소라를 옮기는 일’이라고 부른다. 서너 명씩 짝을 지어 갯바위 위에 천막을 치고 소라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해수욕객과 낚시꾼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는 바다에 대한 권리를 이들이 독점하려든다는 생각보다는 바다를 지킨 사람에게 채취의 권리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라의 자원 고갈과 남획을 방지하는 잠수회의 공동일은 인간이 자원과 공생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논문을 통해서 전통문화 보전과 더불어 자연자원을 지키고 마을공동체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잠수회는 마을공동체 안의 기능중심 공동체이지만 연대와 협력, 공생 등 마을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에 충실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도농교류활동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노동교류 추진이 확산되었다. 노동교류는 교류의 주체들인 도시와 농촌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두 주체가 상생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동교류의 주된 목표를 농촌의 활성화로 삼을 때 상생의 효과는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농교류에서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서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서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다음은 도농교류에 관한 개념정의를 정리한 것이다.³⁵⁾ 이를 통해 도농교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배(1995)	상호방문이나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거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적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
김병률 외(2000)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매력요소를 교환함으로써 서로간의 결핍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동등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혹은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
송미령(2003)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법
유정규(2006)	상호대등호혜의 원칙 하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람, 물건, 정보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의미함
농 어 촌 연 구 원 (2008)	도시와 농촌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 정보, 자본, 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

개념정의에 입각하면, 도시와 농촌이 무엇이든 교류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등한, 그리고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할 때 교류도 지속되고 상생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관여하는 대표적인 도농교류는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교류라고 생각된다. 생산자 여성 농민과 소비자 여성 도시민이 상업적인 교환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교류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주의적 소통이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내재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V.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1. 국내 여성 농민단체들의 활성화와 연대

현재의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자정(自淨)과 강화를

35) 장인봉(2013)의 논문 ‘지방자치단체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중 개념정의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위해 여성 농민단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성 농민단체는 설립된 지 길게는 50년이, 짧게는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들이 이루어낸 변화는 농가로부터 마을, 지자체부터 국가의 농업·농촌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파급적이었다. 오늘 이 포럼 역시 여성 농민단체들의 요구가 이루어낸 쾌거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남성중심의 농민단체나 비농업 여성단체들과 비교해서 강력하지 못하다. 여성농민단체들의 권력이 지금보다 강했다면, 농림부에 여성정책팀이 생기는 데 2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며 해수부에 여성어업인정책팀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단체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발제자는 지난 2014년에 전남여성플라자(현재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용역연구로 조사했던 전라남도 ‘여성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 활성화방안’ 연구³⁶⁾의 내용을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 발제자가 전담한 면접내용을 정리한 표를 통해 4개 주요 단체의 특징을 일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핵심 사안은 첫째, 여성 농민단체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둘째, 여성 농민단체들 사이에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였다.

36) 당시 연구는 전라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여성농민단체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 ‘생활개선회 전남연합회’를 대상으로 각 단체의 회원 중 설문응답자 178명의 응답 분석과 4개 단체의 단체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7명의 참여자들과 심층적 개별면접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구분		전여농	한여농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특성	설립배경	• 농민운동 • 여성회원의 자주권 확보	• 영농후계자지원 • 여성회원의 자주권 확보	• 농협의 농촌여성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일환	• '50년대 농촌여성 계몽과 생활환경 개선
	설립취지	민주, 자주, 통일의 주체로서의 여성농민의 지위향상과 인간다운 삶	농촌의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지역사회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권익신장	농촌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
	사업성격	거시적이며 대중적 운동	농업교육과 이익대변 활동	사회봉사활동	농업산업화 교육
	조직구성	전국연합회 → 도연합회 → 시군연합회 → 읍면조직			
	운영방식	각 단위 연합회와 읍면조직 이원화 / 연합회 주도 계획 및 활동			
	재정	회비, 하위단체의 분담금, 재정사업, 외부지원			
	외부지원	진보적 시민운동단체 및 정당	전남도청	농협	농업기술센터
단체의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한 노동: 변하는 농사일과 변하지 않는 가사일 • 가부장적 문화와 탈가부장성(공동체의식 와해) • 사향하는 농업과 농촌 • 물여성적인 정책과 제도 			
단체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과 임원의 희생과 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 - 책임감 - 사회진출의 욕구 - 자신감과 보람 - 기다림 • 회원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실한 조직의 정체성: 목소리 위임, 이슈공론화, 의식화교육 -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단체 간의 관계(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 단체에 대한 선입견 • 연대에 대한 오해 			

여성 농민단체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 단체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시간이 없고, 생각이 없고, 지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단체에 일할 사람이 있더라도 시간, 생각, 지원이라는 여건이 안되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시간, 생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기도 했다.

7. 왜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국내 주요 여성 농민단체 간의 연대 어려움에 관한 내용은 연구 당시에도 민감했고, 현재도 민감한 사안이지만 여성 농민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대는 필연적인 과업이라 생각한다. 당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상대 단체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그것을 그림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시도도 지금 보면 어설프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입장의 차이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즉 정체성으로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때문에 단체들은 상대 단체가 바뀔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특성들을 연대 구성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있는 역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9. 왜 단체들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단체들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자들의 가장 중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 농촌 공동체성 확대

요한 제안은 여성 농민단체의 모든 활동에 뿌리가 되는 이념, 사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농민단체이니만큼 인권, 여성주의, 생태주의, 농업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 가치들은 마치 반석 위의 흔들리지 않는 집처럼 여성 농민단체를 반석처럼 단체를 받쳐주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체의 모든 활동에, 그리고 단체의 모든 회원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주의적 원칙과 생태주의와 농업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연적으로(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그것에 대한 학습은 여성 농민단체의 상시적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단체의 연대가 이런 교육을 위한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정신적 구조물을 바탕으로 해서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6가지의 변화도 제안하였다. 단체의 정체성을 재확인·재정립하고, 리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며, 획기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고,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농촌여성정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성농업인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단체와 농촌여성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 → 조직 재구성 → 회원확보와 참여유인 → 프로그램 개발 → 역량강화 → 정치세력화로** 이어지며, **내적으로는 이념, 가치, 원칙에 따른 정신력 강화와 외적으로는 연대를 통한 세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이 과정들을 지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구조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농촌과 농업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를 짊어 채운 자본주의적 발상으로는 사회의 주변세력인 농촌과 농업, 여성과 취약계층을 주류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중적 주변인인 여성농업인(여성+농업/농촌)과 그들을 위한 단체의 활성화 방안은 대안적 삶과 대안적 구조 하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다시 말해 단체의 모든 것을 경쟁이 아닌 공생으로, 자본이 아닌 관계로, 상품이 아닌 인간으로, 인위가 아닌 자연으로,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단체를 살리는 길이고 튼튼하게 하는 전략이다.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 농촌 공동체성 확대

1	단체의 정체성 재확인/재확립 '초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심으로 돌아가서 단체의 정체성과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임원/회원 대토론회 개최
2	리더에 대한 인식전환 '회원의 리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진행 ○ 회장, 임원, 회원의 현재 업무 분장에 대한 평가 및 재조정
3	획기적인 조직 재구성 '경계 허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조에 대한 경계 허물기 ○ 특히 중앙연합회와 지역조직 간의 경계 허물기 ○ 임원에 대한 경계 허물기 ○ 신입회원 모집에 대한 경계 허물기 ○ 회원자격에 대한 경계 허물기
4	회원참여 독려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단체 정체성을 살리는 내용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젊은 세대 회원과 나이든 세대 회원의 소통 중점 ○ 주제: 농업·농촌, 자기성장 ○ 방식: 소모임과 자치활동, 교육과 연수 ○ 특징: 지역성에 기반한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가동
5	농촌여성정책 내실화 '여성의 역량강화와 정치세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와 담당자 선정 및 업무의 내실화 ○ 정부의 단체 운영비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정부의 지원
6	여성농업인 단체 연대 '소란스런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임원진 간담회 정례화 ○ 네 단체 연합 연례모임 개최 ○ 단체 연대를 위한 아젠다 확정 및 연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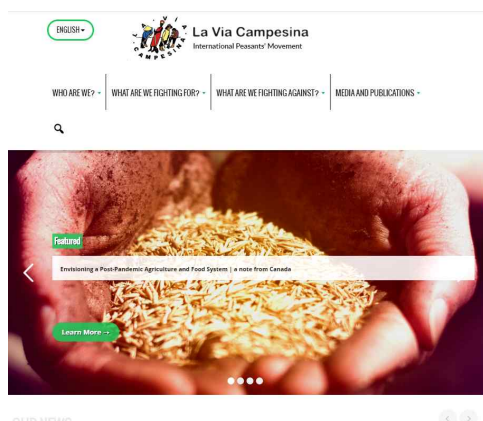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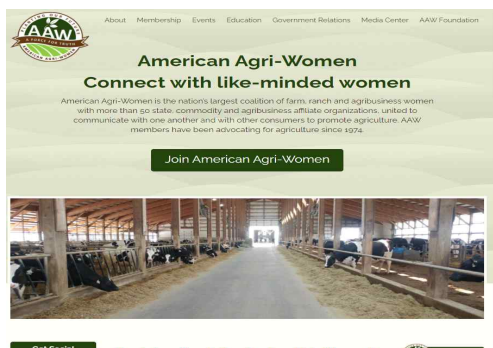
인권, 여성주의, 생태주의, 농업가치

2. 국제 여성 농민단체들과의 네트워킹

지난 제1회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반다사 시바 박사의 초청강연이 진행되어 인도 여성농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주체적 농민으로서의 활동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 강연을 본 국내 여성 농민(특히 젊은 여성 농민들)에게도 여성 농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농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자극적인 동기유발이 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농업의 문제가 국제적 카르텔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 농촌 공동체성 확대

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자극과 확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식의 변화와 행동의 결단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공동체를 넘어 세계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은 여성 농민 자신에게나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나 필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본 포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국제 여성 농민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각 여성단체들이 국제적으로 활동의 반경을 넓히도록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은 여성농민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국제조직의 리스트와 각 조직들의 특성을 소개한 디렉토리가 필요하다. 조직과 조직 간의 연대가 어렵다면, 여성농민들을 위한 국제 행사를 소개하고 행사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올해처럼 농림부의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정도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도 포함해야 한다.

연대의 내용은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연대, 지속가능하지 않은, 세계화된 착취적 농업 카르텔에 대항하는 연대, 여성농민의 탈빈곤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연대 등 다양할 것이다. 국내의 각 여성농민단체들은 단체의 특성에 맞게 국제 네트워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들을 지원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원은 언어 차이로 인한 접근성 차단을 해결해 줄 번역·통역 서비스일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특히 젊은 여성 농민들이 다른 나라의 젊은 여성 농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나가면서

이상의 긴 내용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차후 포럼에서나 혹은 다른 기회에 다루어야 할 내용을 다음의 표로 정리했다.

구분		제안	
1. 신규유입 인구의 공동체 역할 증진	귀농어·귀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귀농어·귀촌정책에 농업과 농촌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포함 정부의 귀농어·귀촌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마을 주민 중 귀농어·귀촌인과의 관계를 담당할 사람을 선정하도록 장려 귀농어·귀촌인 중 여성의 농어촌 적응에 대한 연구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 마을사업에서 세 집단에 속한 주민을 위원으로 포함했을 때 가점 부여
	결혼이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마을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마을 여성주민의 멘토쉽 확대 마을의 여성 농민단체에 결혼 이주여성의 회원가입을 적극추진 	
	청년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 여성농민과 중장년 여성농민의 멘토쉽 지원 젊은 여성농민 조직 지원 젊은 여성농민의 사회적 관계확장을 위한 소셜미팅(취미 동아리, 소셜 다이닝 등) 지원 마을 주요 주민 대상 성평등·성폭력 교육 실시 의무화(이장단 회의 등에서)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에 청년여성 관련 내용 포함을 의무화 	
	각종 마을사업에서의 주민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사업 참여에서 여성주민의 참여를 의무화 마을사업 참여 여성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노동수입 보장 마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마을사업계획서에 갈등해결방안 제시 의무화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2. 농촌 전통문화 의 보전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마을에 대한 지원 •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일을 하는 마을주민에 대한 (직업으로서) 금전적 보상 • 전통문화 보전과 자연자원 보호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런 마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한 소개
3. 도농교류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참여하는 도농교류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원방안 모색 • 여성이 중심인 좋은(여성주의실천을 기준으로) 도농교류 사례 발굴과 사례집 발간
4.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국내 여성 농민단체들의 활성화와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여성농어민단체 연합회(혹은 연대체) 구성 • 위의 연합회 차원에서 여성농어민에 대한 공통 이슈의 학습과 활동 지원 • 지자체별 여성어업인 단체 구성 독려(지자체의 노력)
	국제 여성 농민단체들과의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여성농민단체 디렉토리 개발 • 국제 여성농민 행사 소개 • 젊은 여성 농민들의 국제교류 지원 • 국제 네트워킹을 위한 언어서비스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서 여성의 활동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마을의 의사결정권 확보 포함) • 마을평등규약 만들기 확산 • 마을의 공동체성과 관련한 학습공동체 구성 독려와 지원 • 농산어촌에서 돌봄공동체 (예를 들어 사회적 농업) 조성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참고문헌

- 김백수, 이정화(2013).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와 마을 공동체의식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361-382.
- 김영란(2014). 농촌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회복지. *농어촌복지연구*, 13호. 51-86.
- (2016). 강진군 비자동 여성의 삶과 벼들의 운명. *마을, 마을사람들*. 전라남도농촌활성화지원센터.
- (2019). 사회적 농업, 여성농민의 새로운 길. *농촌여성신문* 제6009호 2019.11.18
- 김영정(2018). 마을공동체와 여성: 공공성과 젠더화된 돌봄의 딜레마. *기억과 전망*, 통권 38호. 13-62.
- 김영정, 안인숙(2015).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 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활용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88.

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농촌 공동체성 확대

- 김정섭(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3.
- 김진희, 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213-259.
- 남인숙, 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문옥희, 김영란, 최정민(2014).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 활성화방안 연구*. 전라남도여성플라자.
- 박주희(2009). 주민주도형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전라남도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9집 2호. 207-242.
- 성주인, 박시현, 정문수, 민경찬(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미정(2007).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제주도 잠수(潛嫂)의 사례에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151-197.
- 오미영, 이진영(2006).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그루터기> 공동체를 통해서 본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여성연구논집*, 17, 125-169.
- 오수호(2013). 귀농·귀촌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윤기찬, 장한나, 문신용(2016).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QOL) 도농간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42(2), 343-367.
- 이영배, 현진주(2018). 마을연구 담론의 경향과 전망. *민속연구*, 36, 38-68.
- 장인봉(2013). 지방자치단체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정책분석평가학보*, 23(3), 177-200.
- 전희경(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서울시 마포은평 지역 비혼/귀어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14권 1호, 75-112.
- 조경진(2017). 한국의 돌봄공백과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vol.20 No.2, 1-39.
- 조성배, 황현(2015). 농어촌지역의 커뮤니티 갈등 유형과 해결방안 연구 - 정부의 마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6권 1호, 5-54.
- 조한혜정(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서울:또하나의 문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Jan Hassink(2017). *Understanding Care Farming as swiftly developing sector in The Netherlands*. PhD Thesis 19 September 2017, Amsterdam Institute of Social Science Research University of Amsterdam.